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 562 호
2016. 5. 30

정책동향

- ▮ 아베노믹스, 건설 투자를 미래 성장의 기반으로 인식
- ▮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 개선 시급해

시장동향

- ▮ 주택 금융, 현실화된 리스크 낮지만 지속적 모니터링 중요

산업정보

- ▮ 주요 선진 국가의 제4차 산업혁명 전략과 모델
- ▮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연구원소식

건설논단

- ▮ 공정위, 건설업계 대사면 취지 살리기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아베노믹스, 건설 투자를 미래 성장의 기반으로 인식

- 「국가전략특구」, 「개혁2020」 등 기술과 결합한 성장 전략 채택 -

■ 아베노믹스, 경기 침체기 공공의 선도적 역할 의미 보여줘

- 아베노믹스는 일본이 20여 년의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도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아베노믹스의 주요 건설 정책은 동일본 대지진 복구 등 재정 정책 지원과 새로운 성장 전략의 일환인 기반 환경 정비를 포괄함.
- 아베노믹스 건설 정책은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성뿐만 아니라 내각부에서도 「국가전략특구」와 「개혁202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등 재정 지출을 통한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인프라의 효율성 극대화과 신칸센 신설과 같은 신규 인프라 투자를 동시에 추진함.
 - 내각부는 규제 완화와 공공 인프라 민간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전략특구」를 핵심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2015년을 기점으로 아베노믹스가 2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도쿄올림픽에 대응한 민간 협력 프로젝트인 「개혁2020」을 개정 성장 전략으로 채택함.
-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아베노믹스 실패 논란은 존재하지만, 건설부문에 있어서는 변화를 이끄는 데 성공함.
 - 동일본 대지진 복구 등 아베노믹스의 적극적 추진으로 건설시장이 장기 침체에서 탈출하는 계기 마련
 - 아베노믹스 추진으로 공공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5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민간 회복을 이끈 것으로 판단됨. 즉, 경기 침체기에 공공의 선도적 역할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줌.
 - 특히, 자산시장 가격이 상승하면서 민간의 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그러나, 저성장기 건설 투자의 경제 성장률 기여도에 대한 고민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아베노믹스 건설 정책은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전반에 있어서는 논란이 여전함.
 - 이는 건설시장 활성화가 거시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승수효과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약화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함.

■ 인프라의 신규 건설과 재고 관리는 미래 성장 기반

- 아베노믹스는 기술 기반의 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규제 개혁을 포함한 인프라 환경 조성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투자로 이해하고 있음.
 - 「국가전략특구」는 우리나라의 ‘규제 프리존’과 비교 가능함. 2015년 8월 「지방창생특구」 개념 도입 후 드론, 자율 주행 기술, 빅데이터 기술 등 기술적 관점이 중시되고 있음.
 - ※ 아키타현(드론 특구), 미야기현(자율주행기술 특구), 히로시마현(빅데이터 활용 특구) 등
 - 「개혁2020」은 프로젝트별 액션 플랜(Action plan)으로 성장 전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제도 개정을 포함하여 미래 세대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3개 분야, 6개 프로젝트를 선정함.
 - ※ ① 차세대 도시 교통 시스템 및 자동 주행 기술, ② 분산 에너지 자원 활용, ③ 범용적 첨단 로봇 기술, ④ 고품질 의료 서비스, ⑤ 관광 입국의 쇼케이스화, ⑥ 대일 직접 투자 확대 유치
 - 내각부 주도하에 경찰청, 총무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내각관방, 문부과학성, 지자체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여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간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음.
- 즉, 건설 투자를 경기 활성화 수단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
 -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반 시설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인식하고 버블 붕괴 직후의 실패 사례와 달리 지역 집중, 예산 집행의 효율을 추구하고 있음.
 - 또한, 자율 주행 차, 드론 등 ICT 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로, 건축 규제 등 인프라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이해하고 있음.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 건설,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 재고 관리의 균형 추구
 - 일정 수준의 인프라 재고가 확보된 일본에서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칸센 신설과 같은 대규모 신규 인프라 투자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노후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선투자를 사회적 안전 확보 및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 이해함.

■ 올림픽 계기로 도쿄 집중 투자

- 올림픽 계기로 도쿄에 집중 투자, 우리나라도 장기적 국토 발전 방향 고민 필요
 - 일본 내에서도 지방 소외에 대한 비판은 존재하나 도쿄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임을 인식
 - 올림픽을 전후하여 도쿄의 경쟁력 향상은 예견되어 있고, 동아시아 경쟁 도시인 서울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현안이 될 것임.
 -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도시는 교통 거점 재구축 등을 통한 컴팩트 시티 정책 추진
 - ※ 컴팩트 시티는 도시 내부의 고밀 개발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자연환경 보전을 추구하는 도시 개발 형태임.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 개선 시급해

- 과도한 행정제재 처분과 중복적 업무처리로 인한 건설업계 부담 해소 시급 -

■ 건설공사대장의 전자적 통보 의무화 → 행정제재 처분 양산

-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는 원도급 업체가 기재·관리하는 원도급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 업체가 기재·관리하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포괄하는 건설공사대장의 전자적인 통보제도를 말함.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net)」의 ‘건설공사정보시스템’과 ‘하도급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건설공사대장(원도급 건설공사대장)은 2003년부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2008년부터 의무화됨.
-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통보와 관련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행정제재 처분을 받음.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 명령(「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에 처해짐.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그리고 시정 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호)를 부과함.

■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인한 행정제재 처분의 지속적 증가

- 건설공사 정보의 활용과 불공정 행위의 적발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동 제도에 대하여 건설업계의 불만이 매우 큰 상황임.
 - 제도 도입 이후, 하도급 관련 보고사항들이 추가되는 등 입력 정보가 과다해지고, 행정적 목적 하에서 「하도급법」 등 타 법률에 의거 서류 혹은 별도 통보하는 내용들을 중복적으로 통보하게 됨에 따라 건설기업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음.
- 통보된 건설공사대장 정보의 변경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변경 사항을 입력토록 하고 있음. 이를 어길 시에는 시정 명령 처분을 내리고, 더 나아가 과태료까지 부과함에 따라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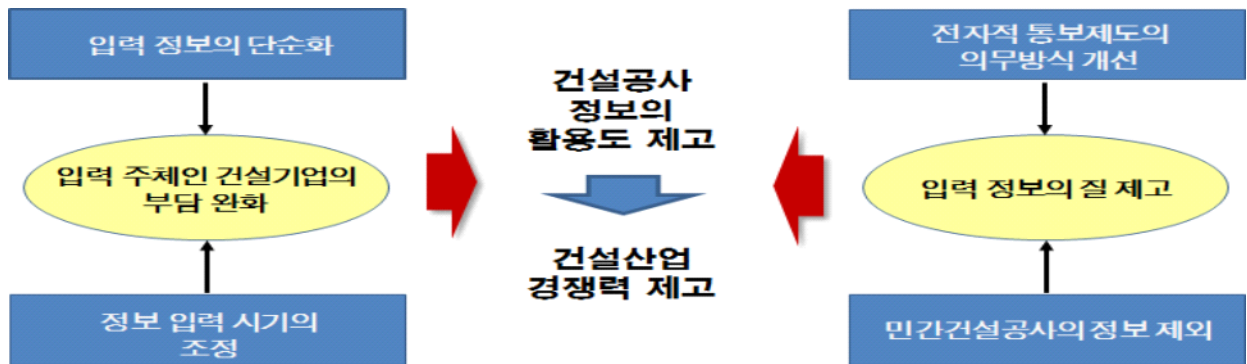
제재를 받는 건설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

- 2013년에서 2015년까지, 3년간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 관련 과태료 및 시정명령 건수는 각각 4,345건과 33,759건으로 나타남.

■ 중복적이고 과도한 정보의 제외와 의무 방식 개선을 통한 행정제재 완화 필요

- 축적되는 건설공사 정보의 질적 향상과 건설산업의 빅데이터로서 건설공사 정보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운영을 위해 입력 주체인 건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입력 정보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건설공사 정보관리 개선의 기본 방향



- 단기적으로는 중복적이고, 행정적 목적으로 요구하는 과도한 정보 입력의 축소가 필요함.
 - 발주자에게 서면 등으로 기 통보하거나 타 법령 및 시스템에 의거 중복적으로 처리하는 정보(특히, 하도급 관련 정보)와 오직 행정제재 목적에서 요구하는 정보 그리고 공사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정보들의 과감한 축소가 필요함.
 - 현행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토록 하는 제도는 공사 기간에 따라 착공과 준공, 6개월 혹은 1년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입력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근본적으로는 입력 주체인 건설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행정제재는 가급적 없애거나 삼진아웃제 등으로 최소화하고, 일본과 같이 기업의 시공 실적과 기술을 홍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입력 내용의 변경과 입찰제도 등에서 인센티브가 필요함.
 - 민간 공사 정보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필요한 정보만 간략히 입력토록 해야 함.

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

주택 금융, 현실화된 리스크 낮지만 지속적 모니터링 중요

- 가계신용 1,223조원에도 연체율은 0.34% 불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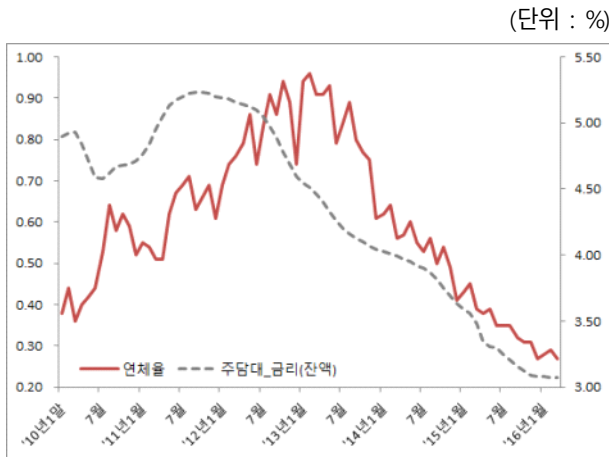
■ 1/4분기 가계신용 1,223조원 넘어섰고, 2/4분기에도 증가세 확대 예상

- 2016년 1/4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 대비 1.7% 증가한, 1,223조원을 기록하며 매분기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음.
 - 전분기 대비 증가세가 둔화되긴 하였으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의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임.
- 4월까지 발표된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고려할 때 2/4분기에는 가계신용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4월 은행의 가계대출(정책 모기지 포함)은 집단 대출과 주택 거래 증가에 따라 전월 대비 5.3조원 증가하여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됨.
 - ※ 은행 가계대출 증감액 : 2016년 2월 2.9조원 → 3월 4.9조원 → 4월 5.3조원
 - 15만 호를 상회하는 2/4분기의 분양 예정 물량을 고려하면, 집단 대출 증가세가 6월까지 지속될 듯
 - ※ 부동산114(주)의 전국 분양(예정) 물량 : 2016년 1분기 5.6만호 → 2분기 15.1만호 → 3분기 8.3만호 → 4분기 6.5만호

■ 가계대출 연체율 지속 하락, 2016년 3월 현재 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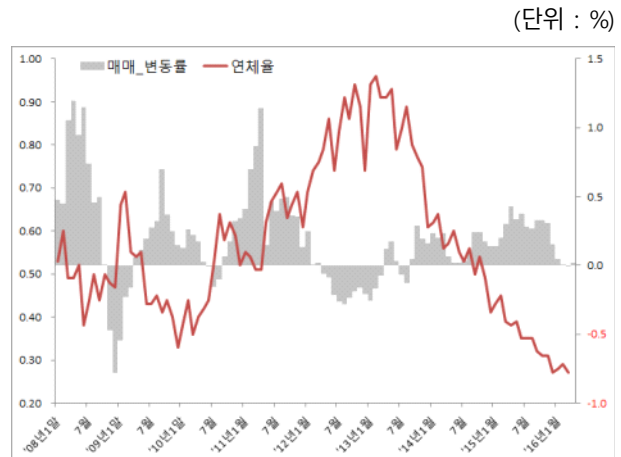
- 가계대출 증가에도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3월 현재 0.34% 기록
 - 2013년 5월 1.04%로 최고치를 형성한 이후, 하락세가 3여 년 동안 지속되어 0.34%까지 낮아짐.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도 비슷한 패턴을 보임. 2013년 2월 0.96%까지 치솟았으나, 2016년 3월 현재 0.27%까지 떨어짐.
 - 2013년 2월 연체율이 1.99%에 이르러 가계대출 중 리스크가 가장 높은 집단 대출 연체율도 3월 현재 0.43%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임.
- 기업 대출의 높은 연체율과 구조조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공급 증가 등 주택시장 내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주택 관련 여신 영업 확대는 불가피함.
 - 2016년 3월 현재 대기업 연체율 0.87%, 중소기업 연체율 0.85%으로 가계대출에 비해 2배 상회
 - 최근 조선업을 위시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 등을 고려할 때 기업여신 확대의 어려움 존재

<그림1>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과
금리(잔액) 추이



주 : 잔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임.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그림2>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과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추이



주 : 전월 대비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임.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 주택가격 변동이 금리보다 짧은 시차로 연체율에 영향 미쳐

- 2012년 전후로 금리가 하락함에도 연체율은 상승하며 1년 4개월의 시차가 발생함.
 - 2011년 10월 잔액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23%로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함. 금리 하락에도 연체율은 2013년 초반까지 상승세를 이어감.
 - 1년 4개월 동안 금리가 0.72%p 낮아졌지만, 연체율은 0.51%p 상승하며 금리와 연체율이 반대의 방향성을 나타냄.
- 주택가격 변동성이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에 비해 시차가 짧은 것으로 판단됨.
 - 금리와 연체율이 역상관 관계를 형성하는 동안 전국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임. 또한, 2013년 초반부터 단기 시차는 존재하나, 주택가격 회복세와 연체율 하락이 동반하여 나타남.
 - 반면, 2011년 하반기에는 매매가격 상승에도 연체율은 빠르게 상승한 시기 존재. 이는 집단 대출 연체율 급증의 영향으로 판단됨.
- 연체율 등을 고려할 때 기업 금융에 비해 주택 금융의 리스크가 낮으나, 관리의 어려움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고려할 때 면밀한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주택가격이 주택금융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의 시차가 짧으나, 정책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지표임.
 - 반면, 주택금융은 가계의 소득과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든 점에서 거시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거시적 분석뿐 아니라 가계 관점의 미시적 모니터링도 필요함.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주요 선진 국가의 제4차 산업혁명 전략과 모델¹⁾

- 산업 특성을 살린 국가 및 산업 차원의 전략 수립, 기술 표준화 전쟁 중 -

■ 주요 선진 국가는 국가 차원 전략과 기업 차원에서의 모델을 수립 및 추진

- 미국, 독일, 일본 등은 201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국가 전략과 선도 기업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 모델을 수립하고 경쟁적으로 추진함.
 - 미국 정부는 2011년 6월에 기술 개발 기본 구상으로서 ‘선진 제조업 파트너십’을 출범시켰고, GE는 2012년 12월에 사물 인터넷(IoT)의 도래를 대비한 ‘산업 인터넷’ 전략을 발표함.
 - 독일 정부와 산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은 2010년 독일 정부의 ‘하이테크 전략 2020’에 기초한 추진 과제 중 하나로 2014년 9월 ‘새로운 하이테크 전략’으로 최종 확정됨.
 -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의 기본 전략인 ‘일본 재흥전략 개정 2015’와 연계한 ‘로봇 신전략’을 2015년 2월에 수립함.

■ 미국 : IoT 생태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산업 인터넷 추진

- GE의 ‘산업 인터넷’ 전략은 네트워크에 접속된 산업 인터넷의 기본 요소(지능화 산업 기기, 클라우드 기반의 고도 분석, 작업 현장의 사람)를 소프트웨어로 연결하여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 비용 절감과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함.
 - GE는 제조·판매된 가스 터빈, 항공기 엔진, 의료기기 등의 하드웨어(제품)에 부착된 센서가 실시간 측정된 가동 데이터를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기의 유지·보수·관리를 포함한 제품의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함.
 - 항공, 전력, 의료, 철도, 석유 및 가스 등의 주요 산업계가 GE가 제안하는 ‘산업 인터넷’ 전략을 채택하여 1%의 효율만 개선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200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됨.
 - GE, 시스코, 인텔 등 미국 IT 기업은 IoT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산업인터넷컨소시엄(IIC), 올신 얼라이언스(Allseen Alliance), OIC(Open Interconnected Consortium) 등의 합종연횡식의 기업 연합체를 결성함.

1) 본고는 ‘제4차 산업혁명(하원규·최남희, 2015)’을 참조하였음.

■ 독일 : 스마트 공장으로 제조 혁명을 도모

- ‘인더스트리 4.0’ 전략은 기계, 저장·재고 시스템, 생산 시설을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 구축된 지능형 통합 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을 통해 공장 가동 데이터를 상호 교환하면서 자율 제어하는 스마트 공장²⁾을 구현하여 제조 혁명을 도모함.
 - 세계 선도 제조 기업이 많은 독일은 전통적으로 강한 제조 기술에 고도의 IT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공장의 선도 시장 창출자(first mover)로서의 위치를 선점하는 것을 지향함.
 - 미국의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인더스트리 4.0’이 실현되면 1% 이상의 GDP 증대 효과와 제조비용의 15~25%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생산력과 수익의 증가로 39만 명의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고 발표함.
 -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EU 차원의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전략’으로 발전되어 EU와 독일은 동일한 기술의 발전을 지향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접근을 취함.

■ 일본 : 로봇으로 새로운 산업혁명의 이니셔티브 장악

- 일본의 ‘로봇 신전략’은 미국의 ‘산업 인터넷’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로봇 혁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이니셔티브 장악을 도모함.
 - 제조, 서비스, 의료·간호, 인프라, 재해 대응, 건설,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등 부문에 로봇을 활용하여 초(超)저출산·초(超)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초대형 자연재해 발생, 인프라 노후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
 - 센서, 인공 지능(AI) 등의 기술 진보로 로봇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사물(자동차, 가전제품, 주거 등)까지도 로봇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제조 현장에서 일상생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 로봇을 활용, 사물의 제조 및 서비스 영역에서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삼음.
 -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과 달리 일본은 일본의 강점인 로봇, 센서, 부품 소재 분야를 지원하여, 제조 강국의 명성을 이어간다는 점은 독일과 같은 전략이라고 평가됨.

이영환(연구본부장 · yhlee@cerik.re.kr)

2) 유럽의 대표적 IT 기업인 SAP의 전 회장(헤닝 카거만[Henning Kagermann])은 “공장은 머지않아 스마트폰과 똑같은 형국이 될 것이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어떤 제품이라도 생산할 수 있는 범용성 높은 장치로 바뀌기 때문이다.”(하원규·최남희, 『제4차 산업혁명』, 158쪽에서 재인용)라고 말한 바 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오전엔 소나타를 생산하다가, 오후 1시부터는 엘란트라 생산 앱을 다운로드해 엘란트라 생산 라인으로 변경된 공장은 엘란트라를 조립·생산한다.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 변경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골자 -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월차임 전환시 상한율의 상한 기준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 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¹⁾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 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변경함.
-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 각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해 서면으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서에 합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 조정서에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함.
 -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우선 사용하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의 예외를 인정함.

■ 전월세 전환율 상한 기준 산정 방식 변경으로 변동성 크게 감소

- 전월세 전환율 상한 기준 산정 방식이 곱하는 방식에서 더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기준 금리 변동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감소함.
 - 기존의 방식은 기준 금리가 0.25%p 변동할 경우 전월세 전환율은 1%p가 변동하나, 새로 개정된 방식은 기준 금리의 변동성과 동일하게 0.25%p씩 변동하게 됨.
 - 더불어 당장 법령 변경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0.5%p(6% → 5.5%) 하락하게 됨.

엄근용(책임연구원 · kyeom@cerik.re.kr)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4배를 말함.

■ 정부 및 공공기관 회의 참여 활동

| 일자 | 기관명 | 주요 내용 |
|-------|-------|---|
| 5. 10 | 국토교통부 | 기획담당관실 주관, '2016년 국토부 성과 평가위원회'에 산업정책연구실 김민형 연구위원 참여 |
| 5. 11 | 국토교통부 | 건설안전과 주관,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개선 TFT(3차) 회의'에 이영환 연구본부장 참여 |
| 5. 13 | 국토교통부 | 건설인력기재과 주관, '건설기능인력 육성 관계기관 회의'에 경영금융연구실 나경연 연구위원 참여 '국토교통 미래비전 2045 수립 관련 건설 TFT(3차) 회의'에 산업정책연구실 박용석 실장 참여 |
| 5. 24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에 산업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 주요 발간물

| 유형 | 제목 | 주요 내용 |
|----------|----------------------|--|
| 건설 이슈포커스 | 향후 국내 건설경기 하락 가능성 진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연구는 올해 국내 건설 수주가 전년 대비 상당 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건설경기 흐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 착안하여 국내 건설 수주와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향후 추이를 예상해보고, 건설경기 하락 가능성에 대해 분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 함께 국내 건설경기의 급격한 하락이 실현될 경우의 파급 영향과 건설 기업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살펴봄. 건설경기 선행 지표인 국내 건설 수주가 지난해 158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호조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0% 급락하고,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2015년 수주 호조세를 견인했던 민간 주택 수주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국내 건설 수주와 투자 간 시차 등을 고려할 때 건설 투자는 2018년부터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2~3년 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종합적으로 볼 때 건설경기 선행 지표인 국내 건설 수주는 현재 경기 사이클상 제2국면인 후퇴기, 동행 지표인 건설투자는 제1국면인 호황기를 지나는 것으로 판단됨. 국내 건설경기 하락이 국내 거시 경제 및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국내 건설수주 하락은 향후 5년 간 GDP 연평균증가율을 0.4% 하락시키고, 총 69.2조원(연평균 13.8조원)의 산업 생산액 감소, 총 45.1만명(연평균 9만명)의 취업자 감소 등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됨. 국내 건설 기업들은 2017년 하반기 이후 국내 공사 매출 감소에 대비해 수주 잔고 확보가 필요하나, 국내외 시장 침체로 인해 리스크가 높은 공사 수주가 우려되는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주 잔고 확보를 위한 단기 전략보다 신성장동력 확보,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비용 절감을 포함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정책적으로는 향후 급격한 국내 건설경기 하락과 이로 인한 거시경제 침체, 일자리 감소 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위해 노후인프라 개선 사업을 민간투자자(RTL 및 RTO)로 추진하는 방안 및 하반기 이후 예상되는 주택 경기 및 수요 하락을 대비한 정책적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CERIK 도서회원」 가입 안내

- 연구원은 건설산업 관련 연구 보고서 및 계간지(「건설산업과 정책」), 주간 건설동향브리핑 등 여러 종류의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음. CERIK 도서회원 가입을 통해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발간물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음. ※ 가입문의 : 출판팀(Tel. 02-3441-0839)

공정위, 건설업계 대사면 취지 살리기를

최근 건설업계는 잇단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대적 입찰 담합 수사에 따라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대사면 이후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추진해오던 중에 10년 전에 이뤄진 입찰 건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는 입찰 담합으로 인한 건설기업의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특별 감면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수년이 지난 입찰 담합 건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 오면서 올해 들어서만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적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실상 지난해 8월에 단행한 대사면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공정위의 행보이다. 정부도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고, 2015년 한 해 동안 국회 및 건설단체, 법 관련 학회 등에서 다양한 입찰담합 근절대책 및 준법, 윤리 경영 확산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적발과 행정제재를 책임지고 있는 공정위의 최근 행보는 아쉽다. 공정위가 적발과 제재를 가하는 것이 기관 고유의 업무라 하더라도 건설산업이 새롭게 태어나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힘을 실어주는 역할 수행 또한 중요함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입찰 담합이라는 시장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며,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획일적인 조사 및 제재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 건의 공사에 대하여 수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을 일시에 부과한다면 업계들의 반발은 차지하더라도 모든 개선 노력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사면의 취지를 살려 과징금 산정과 입찰 담합 조사 및 제재 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영국이 2009년, 과거의 수많은 건설공사 입찰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담합 건들에 대해 일괄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건설산업의 입찰 담합 문제는 정부 부처 일방의 통제와 제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건설기업들의 자정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는 그 실효성에 바탕을 두고 신중하게 실행될 필요가 있다.

〈아시아경제, 2016. 4. 21〉